

입직연령 하향을 위한 조기졸업제도의 활용방안

● ● ● 정기 섭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비해 입직연령 하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취학연령의 하향, 수학년년의 단축 등과 같은 학제개편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학자들이나 이해단체 간의 이견이 분분하고, 관련 종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단기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제도적으로 가능한 조기졸업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입직연령 하향과 대학경쟁력, 그리고 조기졸업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I. 입직연령 하향의 필요성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입직연령 하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무엇보다도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UN의 고령화사회 분류에 의하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령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26년에는 20%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출산을 또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미국(2.05), 독일(1.34), 프랑스(1.92), 일본(1.26)과 비교하여 최저 수준이다. 2006년 출생아 수가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고령화·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국가생산능력이 위축되고 사회적 부담요인이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36,496천 명(73.2%)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35,838천 명(71.7%), 2050년 22,755천 명(53.7%)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입직연령을 하향하자는 제안과 그를 위

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2005년 말 일부 국회의원은 취학연령을 1년 낮추고 고등학교졸업까지의 수학년한을 1년 단축하자는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07년 2월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적자원을 2년 일찍 활용하고 5년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구상되었다. 여기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입직연령(한국 25.0세, 미국 22.0세, 프랑스 23.2세, OECD 평균 22.9세)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군복무기간 단축,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강화, 학제개편이 제시되고 있다. 학제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수학년한 조정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당분간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폭을 억제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학연령의 하향과 수학년한의 단축과 같은 학제개편 논의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관련 종사자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제도적으로 가능한 조기졸업의 활성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입직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입직이 오히려 청년실업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조기졸업제도의 활성화가 극성스런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사교육시장을 과열시키는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직연령 하향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요청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II. 입직연령 하향과 대학경쟁력

주요국들은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교육이동인구(대학생, 대학원생, 학문후속세대)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대학개혁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EU의 대학구조개혁을 들 수 있다. 1999년 6월 19일 유럽 29개국의 교육부 장관들은 이탈리아의 대학도시인 볼로냐에 모여 2010년까지 통일적인 유럽 대학의 틀을 만들자는 데 동의하고 소위 ‘볼로냐협약’을 발표하였다. 전통을 고수하면서 개혁에 둔감하던 유럽의 대학이 예전의 명성만으로는 대학 간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 협약에서 EU는 대학개혁의 목적을 “유럽 대학시스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에 유효적절한 유럽시민의 자질을 촉진”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럽국가 대학에서 석사까지의 과정을 대학졸업으로 인식하고 운영하던 학사·석사 통합 교육과정을 학사와 석사 두 단계(학사→석사)로 구분하고, EU의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학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학점교환제(European Credit Point Transfer System)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단계 과정인 학사과정을 마치고 직업세계에 뛰어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것과 대학 밖의 평생학습을 통하여 취득한 학습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대학에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학·석사과정의 분리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구분되어 있

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해왔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U의 학·석사과정 분리는 외형상으로는 미국식 모형을 수용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대학에서 학·석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직업세계로 진출하던 기존의 구조와 비교할 때 대학에서 직업으로의 이동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볼로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2002년 개정된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에서 학사·석사체계를 도입하고 학사과정을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까지로, 석사과정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전공지식과 실천적인 역량 그리고 선택한 학업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획득하여 직업세계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학문의 순수성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독일 대학의 모습과 비교하여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대학들은 대학기본법을 토대로 3(학사)+2(석사)모형의 교육과정을 주로 구성하고 있다. 학사과정 3년을 마친 후에 곧바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이전보다 더 직업적 능력함양에 초점을 두고 직업과 관계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학 직전교육 단계인 김나지움을 기존의 9년 과정에서 8년 과정으로 전환하여 수업년한을 1년 단축함으로써 입직연령을 더욱 하향화하는 추세에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볼로냐협약을 수용하여 수업년한을 단축한 학사(3)-석사(2) 두 단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1단계(학사) 졸업 이후에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습득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간의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합의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확장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볼로냐협약은 GATS의 다섯 번째 서비스 부문에 포함된 교육서비스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교육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인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UNESCO에 의하면 교육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2000년에 교육수출을 통하여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서비스수출의 3.5%), 호주의 경우도 교육수출이 20억 달러 이상(서비스수출의 11.8%)에 이르렀다고 한다.

참고로 2003년 현재 전 세계의 교육이동인구가 자신의 학업을 위하여 선택하는 국가는 미국(30%), 영국(12%), 독일(11%), 호주(9%), 프랑스(9%), 일본(4%), 스페인(3%), 러시아(3%), 이탈리아(2%), 스위스(2%), 벨기에(2%), 오스트리아(1%),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71,284명), 인도(106,236명), 한국(89,271명), 독일(62,459명), 모로코(53,691명), 프랑스(53,159명), 터키(47,561명), 그리스(46,918명), 이태리(42,90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대학구조개혁은 교육이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의 대학들은 세계의 교육이동인구를 염두에 두고 구조적으로 세계적인 표준화를 지향하면서 대학에서의 교육기간을 줄이고 초기에 입직을 유도함으로써 젊은 나이에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제공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기입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수업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젊은이들의 생활이 이른 시기에 안정됨으로써 결혼을 계획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

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수학년만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 대학의 젊은이들보다 직업적인 삶에 입문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지구화된 세계에서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선망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III. 조기졸업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현재 국내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기졸업제도는 대학마다 조기졸업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더 많은 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수업년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조기졸업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기졸업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정보의 제공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학 초기에 조기졸업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되고 뒤늦게 준비하게 되지만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 초기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조기졸업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학기당 최대학점 신청가능대상자 선발기준의 유연화이다. 조기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기당 가능한 한 많은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정 학점 이상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직전 학기의 높은 평균 평점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전공영역의 교과성적이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다른 영역 교과목의 성적이 낮으면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전공과 직업활동의 연계를 고려할 때 모든 교과목의 학점이 일괄적으로 반영되는 기준적용방식에서 특정 영역의 교과성적반영비중을 달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조기졸업자격요건으로 제시되는 총평점평균의 적용방식에 대한 검토이다. 조기졸업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학기간 중 이수 학점에 대한 총평균평점 적용방식에서 졸업 후 직업세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영역별 이수평점 적용방식으로서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전공 이외에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기졸업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체 이수과목에 대한 높은 평균평점을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조기졸업자격요건인 평균평점의 적절한 기준에 대한 논의와 영역별(예: 교양, 전공, 필수, 선택) 비중을 달리하는 평점의 반영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교과선택의 가능성 제공이다.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들이 조기졸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개설된 과목이 적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표를 짤 수 없다는 것이다. 허락하는 범위의 최대학점 수강신청을 하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개설되는 교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의 개설을 늘리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학교 밖의 기관에서 취득한 평생교육차원에서의 학습 결과를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허락하는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네 번째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학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인턴십)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학

습 결과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공별로 인정가능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더 나아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서 조기졸업자격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요구학점만 이수했다고 해서 졸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가 관장하는 조기졸업자격시험을 도입하여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고등학교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교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대학 초기에 이수해야 할 과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AP 이수과목이 대학입학 후에 학점으로 반영됨으로써 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을 줄여준다든지 또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요원한 것이기는 하나 유럽의 인문계 고등학교 고학년에서 이미 대학의 전공과 관련된 전공기초교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 전공교육과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에서의 수업년한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을 초기에 졸업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초기에 입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점취득에만 몰두하여 깊이 있는 학문연마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 밖의 다른 능력 계발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갖고 있다. 조기졸업제도의 활용과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형적인 시간단축에만 관심을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양, 전공지식, 직업적 행위능력, 사회적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의 균형적인 습득을 어떻게 짧은 기간에 가능하게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조기졸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조기졸업기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조기졸업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재정경제부 등(2007).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 통계청(2007). 2006년 출생통계결과. 보도자료.
- Julius, A.(2006). Zulassung ausländischer Studierender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www.tu-berlin.de/.../hochschultag/julius_auslaendisch_studierende.pdf
www.bologna-berlin2003.de/pdf/bologn_deu.pdf
www.asafu.de...

정기섭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 한독교육학회 회장이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교육현실과 교육학』, 『독일 대안학교 개념의 이해와 실천적 특징』, 『헤르만 리츠의, 교육이념과 교육실천의 주요 원리』, 『독일청소년의 방과후 활동현황』 등 다수가 있다.